

03

디지털 성폭력 현황과 대응방안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최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들어가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성폭력 관련 법안들의 입법처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8년 상반기 한국을 뒤흔든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성폭력관련법안은 132개에 달한다. 그 중 대부분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규율하는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개정안이다. 한편 2018년 기상계측 이래 최고의 불별더위에도 불구하고 7만 명의 여성들이 불법촬영을 근절하라는 요구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8월 4일 4차 시위까지 참여 인원만 누적 18만 7천여 명이다.

2017년 9월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불법촬영과 관련한 피해는 하루가 멀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의 미온적 수사 태도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거리로 나온 여성들의 분노와 피해에 대한 불안도 여

전하다.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폭력은 확대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공간 내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적 표현과 성적 희롱이 더해지면서 온-오프의 경계를 넘나드는 성폭력이 양상을 달리하며 피해가 확장되고 있다.

그간의 성폭력이 물리력을 동반한 실제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주로 구성되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가 흐려지며 다수의 가해자가 실질적인 물리력 행사 없이도 피해를 확장, 지속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현황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의미

사이버 성폭력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며,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다. 사이버 성폭력은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인터넷 기반 성폭력, 성적 이미지 조작/착취 성폭력,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¹⁾.

사이버 성폭력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 예컨대 불법 도촬, 비동의유포 성적 촬영물 등 디지털 촬영기기로 촬영한 촬영물을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성범죄를 대표로 한다면,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유포가 이뤄지지 않은 불법 도촬도 포함하여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²⁾.

2013년 호주에서 진행된 Smart safe 프로젝트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매체(ICT)를 이용한 폭력을 기술기반폭력(Technology Facilitated abuse)으로 규정하고,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전송, 위협적인 전화통화, 추적시스템 사용을 통한 감시 및 피해자 행적 추적, SNS에서의 괴롭힘, 성적 이미지 유포 등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한다. 2013년에 이뤄진 Smart safe 프로젝트에 참여한 152명의 가정폭력 사건 담당자와 피해자 46명은 전 데이트 상대부터 기술 매체를 활용한 폭력에 대해 98%가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했고, 가해자가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스마트폰, 휴대전화, 소셜

미디어, 이메일, GPS 추적 등으로 나타났다.³⁾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기술기반젠더폭력 등의 개념 확장에 따른 용어 정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못해 앞으로 관련 연구와 논의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 글은 피해유형상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불법촬영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작성되었으며, 이를 사이버 공간 내에 유포하는 행위, 그것이 소비되는 유통플랫폼의 문제 등을 포함한 용어로 디지털 성폭력을 사용하였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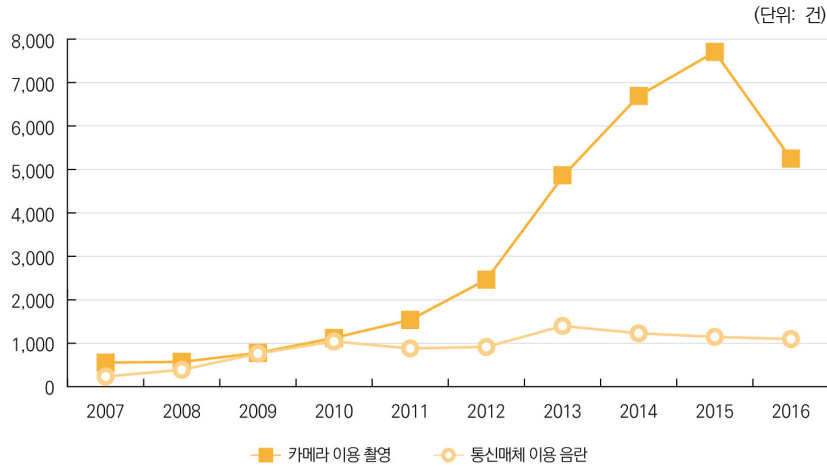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위반한 불법 촬영 신고 건수는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3.4배 증가⁴⁾하였고,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카메라이용촬영죄가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564건)에서 2015년 24.9%(7,730건)로 최고치를 기록, 2016년에는 다소 감소한 17.9%(5,249건)를 보였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해당하는 범죄의 신고 건수도 2007년 240건(1.7%)에서 2017년 1,115건(3.8%)으로 약 2배 증가했다.

1)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2017),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2) 서승희(2017), 사이버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3) 'Technology-facilitated abuse: the new breed of domestic violence', The conversation(2017. 3. 27), Hadeel Al-Filosi. <http://theconversation.com/technology-facilitated-abuse-the-new-breed-of-domestic-violence-74683>

4)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 6. 4)



자료: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

[그림 1] 카메라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 건수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신고 건수가 2007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2016년 다소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이 더욱 필요한데 2015년 이후 수사 당국의 대대적인 음란물 사이트 단속으로 국내 제작 촬영물의 주 유통경로인 소라넷이 2016년 4월 폐쇄되는 성과라는 분석⁵⁾도 있으나, 이는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더욱 세력화된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불법촬영된 이미지를 유통플랫폼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 현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⁶⁾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012년 심의건수는 1,130건에서 2016년 7,356건으로 약 6배 정도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폭력 정보 조치 현황

(단위: 건)

년도	심의	시정요구		
		삭제	접속차단	계
2015년	3,768	63	3,573	3,636
2016년	7,356	10	7,315	7,325
2017년	2,977	1	2,976	2,977
2018년 (~4. 30)	3,189	62	3,100	3,162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8.6.4)

2017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가 2016년 대비 감소된 것은 2017년 6월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 종료 후 2018년 3월까지 제4기 위원회

5) 조주은, 최진웅(2018),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경민의원실 제출(2017),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위원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⁸⁾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표 2>를 보면 시정조치가 접속차단이 대다수인데, 접속차단은 해당 정보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이용자에 대한 접속차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범죄에 관한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에서의 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불법콘텐츠 범죄

(단위: 건)

년도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
2014년	4,354	8,880	363
2015년	4,244	15,043	134
2016년	3,777	14,908	56
2017년	2,646	13,348	59

경찰청에 신고되는 사이버음란물이나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신고 건수가 모두 감소추세이지만,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의 경우, 2014년 8,880건에서 2017년 13,348건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 사이버 공간(게임 공간 포함) 내에서의 성희롱 등이 이에 해당하는 피해이다. 이러한 피해의 경우 불법촬영된 사적인 정보가 담긴 이미지나 성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게재하거나 해당 이미지를 빗대서 상대방에게 성적 희롱을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자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심의기관에 심의요청을 한 경우만 취합되고 있어 피해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통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겪고 있는 다층적인 피해양상, 피해자가 선택하는 해결방안과 이를 가능케 할 법·정책적 보완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기관에서의 피해 현황을 함께 살펴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7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상담 현황

한국성폭력상담소에 2017년 접수된 디지털 성폭력(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포함) 상담 건수는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 1,260건 중 113건으로 전체 상담에서 8.9%에 해당한다.

<표 3> 한국성폭력상담소 디지털 성폭력 상담 현황

(단위: 건, %)

년도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	디지털 성폭력 상담 건수	전체건수 대비(%)
2013년	1,418	82	5.8%
2014년	1,450	75	5.2%
2015년	1,308	90	6.9%
2016년	1,353	94	6.9%
2017년	1,260	113	8.9%

7) 당시 정치권에서 4기 위원 추천 수를 두고 합의를 하지 못해 약 9개월간 사실상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379>

8) 조주은, 최진웅(2018), 앞의 자료.

〈표 4〉 한국성폭력상담소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현황

(단위: 건, %)

나이/성별 구분	피해자			가해자		
	여성	남성	미상	여성	남성	미상
고령(65세 이상)	-	-	-	-	2 (1.8%)	-
성인(20-64세)	90 (79.6%)	6 (5.3%)	-	2 (1.8%)	78 (69.0%)	1 (0.9%)
청소년(14-19세)	10 (8.8%)	-	-	1 (0.9%)	11 (9.7%)	-
어린이(7-13세)	3 (2.7%)	1 (0.9%)	-	-	1 (0.9%)	-
유아(6세 이하)	-	-	-	-	-	-
미상	3 (2.7%)	-	-	-	9 (8.0%)	8 (7.1%)
합계	106 (93.8%)	7 (6.2%)	0 (0.0%)	3 (2.7%)	101 (89.4%)	9 (8.0%)

〈표 3〉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 중 디지털 성폭력 상담 건수는 5.8%에 불과하였는데 2017년 8.9%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피해에 대해 알게 된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피해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를 인식하게 된 피해자들도 그만큼 증가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상담 피해자와 가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93.8%(106건)는 여성이며 이에 반해 가해자의 89.4%(101건)는 남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화된 현상은 디지털 성폭력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소비하는 메커니즘이 반영된 젠더폭력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고령(65세 이상)도 2건 피해상담이 접수되어 대부분 19세 이상의 성인이 가해행위를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의 확대로 10대인 청소년부터 60대 이상인 고령에 이르기까지 가해자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미상인 사례도 8.0%(9건)로 나타나

는데 이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표 5〉 피해연령별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나이가 성인인 경우,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겪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2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 데이트 상대로부터 겪은 피해가 15.9%로 그 뒤를 이었다. 성인 피해자의 경우, 현재 데이트 관계로부터 겪은 피해도 8.8%에 해당하였는데, 피해당사자가 피해자 본인인면서 가해자의 이전 데이트 상대의 불법 촬영물까지 한꺼번에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해자가 친형제이거나 전 배우자, 전/현 데이트 관계인 친밀한 관계 내에 있는 경우가 30%에 해당하였고, 아는 사람인 경우는 전체 피해상담 중 77%에 해당하였다.

가해자를 전혀 모르는 경우도 17.6%에 해당하였는데, 길거리 등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거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촬영된 이미지 또는 영상이 유포된 것을 확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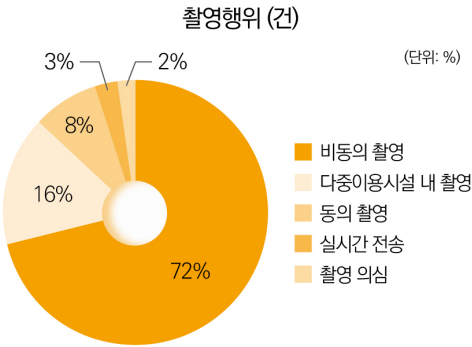
〈표 5〉 피해연령별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

관계 / 나이별	아는 사람 87 (77.0)										모르는 사람	미상	합계
	친밀한 관계 34 (30.0)				인터넷 채팅/ 동호회	소개로 만난 사람	주변 지인	직장 내	학교 내	학원			
	친형제	전 배우자	전 데이트 상대	현 데이트 상대									
성인	1 (0.9)	1 (0.9)	18 (15.9)	10 (8.8)	6 (5.3)	3 (2.7)	6 (5.3)	27 (23.9)	1 (0.9)	2 (1.8)	16 (14.2)	5 (4.4)	96 (85.0)
청소년	-	-	3 (2.7)	-	-	-	1 (0.9)	-	1 (0.9)	1 (0.9)	3 (2.7)	1 (0.9)	10 (8.8)
어린이	-	-	-	-	1 (0.9)	-	-	-	2 (1.8)	-	1 (0.9)	-	4 (3.5)
유아	-	-	-	-	-	-	-	-	-	-	-	-	-
미상	-	-	1 (0.9)	-	1 (0.9)	-	-	-	-	-	1 (0.9)	-	3 (2.7)
합계	1 (0.9)	1 (0.9)	22 (19.5)	10 (8.8)	8 (7.2)	3 (2.7)	7 (6.2)	27 (23.9)	4 (3.6)	3 (2.7)	20 (17.6)	6 (5.3)	1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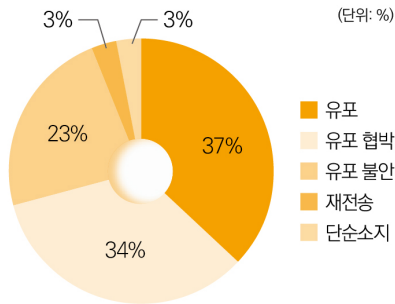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카메라 이용촬영 상담 세부 통계

2017년에 이뤄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중 카메라 이용촬영에 해당하는 상담은 64건으로, 피해 상담의 세부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촬영행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동의 촬영이 46건(72%)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다중이용시설, 즉 화장실이나 지하철 내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 몰래 찍히는 이른바 ‘몰래카메라’가 10건(16%)으로 높았다. 촬영 당시 동의하에 촬영된 사례는 5건(8%)이었으며, 생방송이나 몸캠 등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동시에 촬영된 사례도 2건(3%), 촬영 의심은 1건(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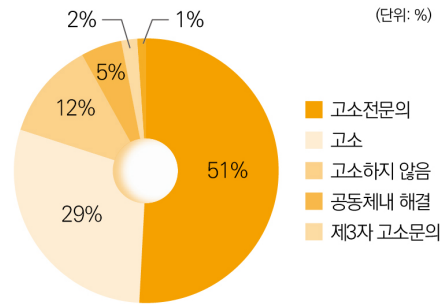


〔그림 2〕 카메라 이용촬영 상담 촬영행위 통계

비동의 촬영 또는 촬영 당시 동의하에 찍은 이미 지나 영상을 근거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유포에 이른 예도 있었는데, 유포관련 중복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유포관련 중복 피해



[그림 4] 고소 여부

실제 유포에 이른 경우는 13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유포 협박은 12건(34%)으로 주로 현재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친구나 가족 등에게 전송하겠다는 협박이었다. 유포 불안은 유포에 이르지 않았으나 가해자가 소지한 이미지나 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호소한 사례였다. 대부분 촬영 당시 이미지나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여 삭제하였으나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였다. 피해자에게 촬영된 이미지를 재전송하거나 단순 소지한 상황을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현행법상으로 처벌되지 않아 법적 피해 구제에 대한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하에 촬영한 사례의 경우 모두 유포 또는 유포 협박 또는 불안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는데, 촬영 당시 동의했다 하더라도 사후 유포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 실제 유포에 이른 경우 등이었다.

대다수 유포 또는 유포 협박을 겪고 있었으나 법적 고소를 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고소 전 단계에서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하거나 고소 여부에 관해 결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33건(51%)으로 가장 많았는데, 유포 협박을 하는 경우 고소를 하면 실제로

유포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으로 고소전 대응방안에 관해 문의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유포 협박이나 유포 불안의 경우, 유포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할 수 없거나 고소하더라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적 처벌의 공백도 존재한다.

디지털 성폭력 대응방안

현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법적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고소의 방법이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피해로 구성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 현행 법체계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상담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되지 않는 피해들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체계 보완 그리고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현행 카메라이용촬영죄 법체계 정비 및 보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죄의 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하거나 유포한 경우 처벌규정이 고, 제14조 2항은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 제14조 3항은 영리 목적으로 비동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제14조 1항에 근거한 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되어있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⁹⁾ 또는 영상이거나 신체가 아닌 성적인 이미지를 촬영 또는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생방송 중이거나 몸캠 등 신체가 아닌 전송장치를 통해 이미지나 영상이 전송될 경우 이를 재촬영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법체계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제14조 3항은 영리 목적으로 비동의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인데,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는 일괄적으로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외적 구속 수사 진행의 필요

불법촬영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바로 유포 불안이다. 실제 유포 협박을 겪고 있거나 유포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이에 양심을 품은 가해자가 바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게 될 경우, 피해 상황은 유포 이전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압수 수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유포 전 단계인

단순 소지와 관련해서 처벌규정도 없어 이에 대한 강제성을 가지기도 어렵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형사소송법 제198조)이 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포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포 협박 또는 유포에 이른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예외적 구속 수사 진행의 필요가 있다.

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 행위 처벌규정 마련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동의하에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의 경우 모두 유포되었거나 유포 협박을 겪거나 유포 불안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포된 경우에는 처벌법상 처벌할 수 있지만, 유포 협박을 겪거나 유포 불안을 호소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유포 협박의 경우, 형법 제283조 협박죄¹⁰⁾로 처벌할 수 있으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적고 성폭력처벌법상 고소가 아니어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장되는 권리(국선변호인 지정 등)가 보장되지 않는다. 예컨대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촬영물을 아직 유포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행위에 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면 비동의 유포 촬영물에 대해서 자신이 유포하지 않았다고 가해자가 부인하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여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지만, 단순 소지로 처벌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도 막을 수 있다.

9)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때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다수(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안, 남인순 대표발의안 등) 발의되어있음.

10)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온라인 유통플랫폼 규제 방안 마련

현재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등이 지원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유포 자체를 막는 방안일 것이다. 물론 고도로 발달하는 기술발전과 조작 및 대량 유포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유포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지금보다는 유포 자체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¹¹⁾상 웹하드나 P2P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음란물의 다운로드, 업로드, 검색 등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여 이를 처벌조항으로 규제할 필요성¹²⁾이 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개선과 젠더 감수성 교육 의무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를 가능케 할 교육의 의무화일 것이다. 여전히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행위에 대해 가해자들은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이를 다소 경미한 피해로 이해하는 인식도 여전하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성적인 이미지가 유포된 이후에는 이미지가 소비되는 동시에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확대 재생산되어 피해자들은 유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불안감과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동의촬영, 유포, 재유포, 이를 가능케 하는 유통플랫폼의 구조 및 산업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사적인 정보, 성적인 이미지를 유통하거나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타인의 성적인 이미지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범죄라는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기술 매체의 발전에 따른 젠더폭력의 다양한 피해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법기관의 자세와 주변인으로서 나 스스로 감수성의 변화를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나가며

최근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처벌의 공백은 존재하고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에 따라 기술매체에 기반한 젠더폭력은 그 피해양상이 다양하게 변화 확대될 가능성이 많고, 그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는 더디게 변화하고 있다.

27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8월 13일 경찰

11)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는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이 소관위 접수된 상태임.

청에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수사, 단속,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수사단을 설치, 26일 기준으로 한 달 반 동안 1,012명을 검거해 63명을 구속¹³⁾했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그동안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 51곳을 단속해 31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고도 밝혔다.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대표 5명, 해비업로더 82명, 불법 촬영자도 무려 4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버가 해외에 있어 처벌하기 어렵다, 관련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 비판을 감지한 듯

경찰청은 집중단속 한 달 반만에 신속하게 수사 및 검거에 나섰다. 이 또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혜화역에 여성들이 모여 외치지 않았다면 이를 수 없었던 결과이다.

한국 내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제 시작되었다. 관련 법 제도의 정비 및 보완, 기술 매체를 기반으로 한 젠더폭력으로서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지 않는 감수성 교육 등 더 오랫동안, 끈질기게 지켜보고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13) 민갑룡 경찰청장 “디지털 성범죄 수사로 1012명 검거”, 한겨레, 정환봉 기자, 2018. 9. 27.